

“도시공원 ‘삶의 질’ 제고가 먼저”

윤장현 시장 민간 공원 특례 사업 3대 원칙 제시

중앙·중외·일곡 등 국가공원 지정 공동 대응

민간 개발때도 공공성 확보...기능 유지 최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공원 보존, 대표 도시공원 국가 지정 노력, 공공성 확보와 공원 기능 최대한 유지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들 원칙을 오는 9월 8일 제안서가 접수되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이 이날 밝힌 첫 번째 원칙은 시

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도시공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한다는 것이다. 또 공원 일몰제가 국가적 의제라는 측면에서 중앙, 중외, 일곡 등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을 국가공원(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민간 개발 형식을 취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한 가운데 최대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시장의 원칙이다.

이날 윤 시장이 이들 원칙을 1단계 사업 대상인 수암, 마록, 송암, 봉산 등 4개 공원에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오는 9월 8일

까지 제출되는 제안서 심사의 중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에 엄격한 심의를 주문함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있어서 공공성 향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에는 공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 및 교수, 시의회, 시청 주요 관련 부서 등이 모두 참여시킨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윤 시장은 “도시공원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이 숙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곧 ‘광주형 도시공원 해법’이며 이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간판 바꾼 해양경찰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26일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조직 개편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청사 현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땅값 올랐는데...” 솔라시도, 토지보상 문제로 또 삐걱

주민대책위 “보상가, 인접지의 3분의 1 그쳐...80%는 돼야”

10년 넘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지역으로 뒤흔게 이뤄진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재산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인근에서 보상가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기업도시 편입 토지 보상가가 전남도가 시행하는 진입도로 대상지 보상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한 필지 중 진입도로 대상지는 평당보상가가 11만7750원이지만 기업도시 편입토지는 4만3800원에 그치고 있다. 사업 인정 고시 시점이 기업도시는 2010년, 진입도로는 2016년이어서 보상가 기준 과정에서 6년의 시차가 발생해 가격 차가 생긴 것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잘못된 표준지 선정 등이 더해져 토지 가격이 할값으로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6년의 시차가 있더라도 땅 값이 인접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80% 이상은 돼야 정상적”이라며 “보상가 책정 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솔라시도 사업은 2005년 4월 전남도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해 4개월 뒤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태동했다. 그러나 간척지 양도·양수,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사업명도 ‘J프로젝트’에서 태양(Solar·솔라)과 바다(Sea·시)에서 차용한 영어 발음을 한글화해 계 이름의 높은 음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솔라시도’로 바뀌었다.

해남 구성지구, 영암 삼호지구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구성지구에는 2500가구를 수용하는 시니어 타운, 18홀 규모 골프장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성지구는 634만평 가운데 사유지가 140만평에 달해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대 뒤떨어진 대기업 중심 양적 성장 끝내고

소득 주도 성장...경제 체질 ‘일자리’ 중심 전환

문재인 정부, 사람·분배 경제정책 방향

저성장 고착화·고령화 가속...새 패러다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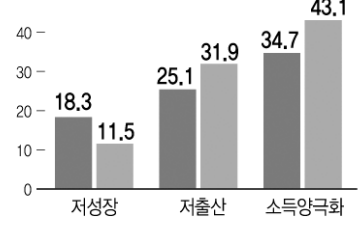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 결과

7.10~14 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 대상

경제 전문가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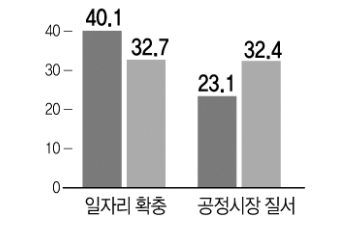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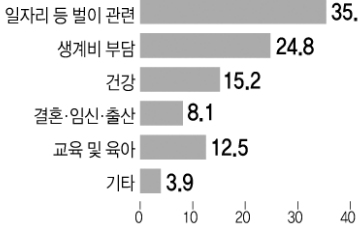
경제정책방향 우선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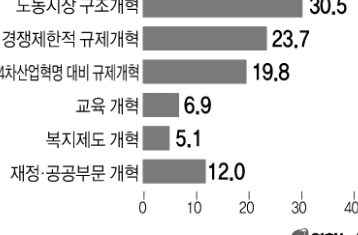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

일반 국민 응답, 단위: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 필요 분야

전문가 응답, 단위: %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성장은 소득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 청사진이 담겼다.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라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로만 여긴 가계를 경제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로써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갈렸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옛 패러다임...

곳곳에서 ‘삐걱삐걱’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새판짜기는 현재 한국 경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경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현실에서 무엇을 건드려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의 포인트였다.

한국 경제는 1995년 이전까지 성장률이 연 0.08%포인트 떨어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연 0.26%포인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이 둔화하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한국의 성장을 하락 속도가 심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을 빼면 2000년대 들어 0~4%대 성장률을 지속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국, 영국, 독일의 경제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점도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

였다. 여기에 분배마저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악화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끈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인프라 등 물적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를 꾸렸다. 성장효는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 수지 등 숫자로 체크했다. 옛 패러다임에서 보면 고용,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였다. 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 수출기업이 과실을 가져가고 가계나 중소기업의 몫은 적었다. 이는 고스란히 가계·기업 사이의 격차, 가계·기업 간 불균형, 내수·수출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마저 꺾이게 됐다. 이 것이다.

▲경제 중심에 사람을...3% 성장 능력 갖춘 경제=문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 중심 경제다. 성장의 견인차를 수출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복합 경제 위기를 푸는 실마리로 보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원)에 나선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확립에도 신경 쓰는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별 대기업의 담합,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행사 차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2%, 고용률은 54.8%로 각각 1.1% 포인트(p) 상승했다.

취업한 경험이 있는 55~64세 고령층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년 3.8개월로 1년 전보다 4.7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전체의 3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5월 기준 한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는 1291만6000 명으로 1년 전보다 4.

연방뉴스

“생활비 벌려면 72세까지는 일해야”

55~79세 취업 특성 조사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55~79세)이 72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목적은 절반 이상이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고령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52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층 부가조사는 이 연령대의 취업 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5월 14~20일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5월 기준 한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는 1291만6000 명으로 1년 전보다 4.

2%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2%, 고용률은 54.8%로 각각 1.1% 포인트(p) 상승했다.

취업한 경험이 있는 55~64세 고령층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15년 3.8개월로 1년 전보다 4.7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전체의 3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00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00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00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00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00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00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00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00원(보3,700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00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00원
3. 신가동 생산숙지 담745㎡ 매3,650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00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00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00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00원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